

월요광장

지역 출판과 문예지를 보는 시각



송 광 롱 시인·문학발 발행인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한국산문작가 협회 사무실에서 '문예지 지원 제도의 현황과 제언'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이 열렸다. 문예지 '문학의오늘'과 '시작' 그리고 '한국산문 편집위원회'가 공동주최한 이 토론회의 목적은 정부가 폐지한 '우수 문예지 발간 지원 사업'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었다.

우수 문예지와 문학 분야 주요 기관지의 원고료를 지원했던 이 사업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문예지를 살리고 원고료를 지급하여 작가들의 생계를 돕는 역할을 해 왔다. 55개 문예지에 10억 원이 지원된 2014년에는 월간지에 3000만~4000만 원, 계간지에 1000만~2000만 원이 지원되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주관해 온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는 지난해 예산을 3억 원으로 깎고 지원 대상을 14곳으로 줄이더니 올해는 아예 이 사업을 폐지해 버렸다.

결과는 참담했다. 지원금이 끊기자 중

합문예지 '세계의 문학', 시 전문지 '유심', 장애인 문학을 대표해 온 '순대문학' 등이 잇따라 폐간됐다. 머잖아 ○○, ×× 문예지들이 폐간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지구적으로 책의 면수를 줄이거나 합본 호를 내는 곳도 있다. 작가나 독자에게 후원을 읍소하는 문예지도 적지 않게 됐다. 계간 '문학들'도 CMS 자동이체나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후원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예술위'는 이 사업이 "문학적 성과와 무관하게 작가나 단체들이 자금 지원에만 의존하게 하고 (출판사의) 시장 개발 의지를 약화시킨다"고 사업 폐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체 한 명의 작가가 한 해 동안 몇 편의 작품을 문예지에 발표하는지, 그 원고료는 얼마나 되는지,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는 있는지 실태조사라도 해 보고 하는 말인지 궁금하다. 그동안 지원받은 문예지들은 지원금을 원고료로 썼다는 증빙을 이중 삼중으로 해야 했다. 지원받은 첫해부터 지원금 전체를 원고료로 지급했고, 그레도 부족해 적잖은 출혈을 해 온 '문학들'로서는 '예술위'의 입장이 못내 섭섭하다.

자생력을 잃어버린 시장에서 '시장 개발 의지'를 기대할 수는 없다. '예술위'의 태도에는 작가나 문예지에 공인이나 공공재가 아니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다. 책을 사고팔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것은 책에 공공의 가치가 있다고 보

기 때문이다. 그 책을 만드는 곳이 출판사고, 작품을 쓰는 이가 작가이며, 그 작품이 발표되는 지면이 바로 문예지다.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도종환 의원은 "문예지의 활성화 없이 문학의 발전, 문화콘텐츠의 발전, 한류 문화의 발전은 모두 불가능하다"고 했다. 정부나 지자체가 미래의 산업이라 예감하고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콘텐츠산업의 원천이 바로 문학이기 때문이다. 문예지와 작가를 단순히 시장논리로만 보기보다는 공공재와 공인으로 봐야 하는 이유이다.

같은 논리로, 지역출판사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2014년 출판산업실태조사'(2013년 기준)에 따르면, 전국에 출판사 신고확인증을 보유한 4만4873개의 출판사 중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6414개사(14.2%), 그나마 2013년 한 해 동안 매출 실적이 있는 업체는 3933개사(8.7%) 뿐이었다. 그렇다면 2012년 기준 지역별 출판사 현황을 보면, 전체 3만9315업체 중 서울 2만4496개사(62.3%), 경기도 6307개사(16.0%), 인천 823개사(2.1%)로 수도권에 80% 가량의 출판사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중 광주는 802개사(2.0%), 전남은 431개사(1.1%)였다.

문제는 그나마 20%를 차지하는 지역출판사 중에서도 퍼낸 책을 서점에 유통시키는 출판사는 손에 꼽을 정도이고 나

머지는 단순 인쇄업이나 출판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지역에서 저자의 글을 출판하여 독자가 서점을 통해 책을 만나는 선순환 체계는 이미 오래전에 망가졌다고 봐야 한다. 이래서는 지역의 문화나 지식, 혹은 콘텐츠를 제대로 담아 낼 길이 없다.

한 가지 신기한 것은,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도 눈여겨보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지역의 속살을 더듬으며 어렵사리 고군분투하는 출판사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대구의 '한티재', 홍성의 '그물코', 청주의 '직지', 통영의 '남해의불날', 하동의 '상추쌈', 진주의 '펄벅스', 부산의 '산지니', 제주의 '각' 등등. 더 이상 중앙 바라기를 하지 않고 지역 사람들과 함께 맘 흘리며 그들의 삶과 문화와 역사를 책으로 엮어 내는 이들의 활약은 경이롭고도 아름답다.

지식과 문화의 가치는 동일하지 않은 차이가 있다. 다른 지역의 그것과는 다른 그 무엇은 그 지역만의 내밀한 속내를 알지 못하면 터득하기 어렵다. 중앙에서는 돌릴 짚도 없고 꿈도 꾸지 못할 일이다. 지역의 문화와 지식과 콘텐츠를 살리려면 지역 출판사가 살아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들을 '공공재'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며 지역 출판과 지역 도서, 지역 독자들의 사기를 북돋는 제도를 마련하고 지원하는 일이 시급하다.

또한, 대표통장 명의인은 금융거래에 있어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과 전 계좌에 대한 비대면거래가 제한되고, 통장 양도 이력 고객 정보가 금융거래의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나아가 금융사기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최근 대법원은 자신의 명의로 개설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한 통장이 보이스 피싱 범죄에 사용된 사안에서, '비록 보이스 피싱의 범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통장을 양도함으로써 그와 같은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하는 것은 내 가족을 포함하여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순간의 욕심으로 전과자의 오명을 쓸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여야 한다.

법조칼럼

순간의 욕심, 전과자 오명



안 성 민 광주지검 검사

검사실 문을 열고 수갑을 찬 옛된 얼굴의 아이가 고개를 숙인 채 들어왔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열아홉 살이었다. 아이는 구직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중국에 사무실을 차린 보이스 피싱 일당으로부터 '대표통장을 만들 어주면 통장 한 개당 5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현혹되었다. 아이는 대표통장 수개를 만들어 그들에게 양도하였다. 더 나아가 피해자들이 보이스 피싱에 속아 대표통장에 입금한 돈을

대신 인출하여 보이스 피싱 일당들이 지정한 다른 통장으로 재송금 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돼 구속되었다. 아이는 조사를 받는 내내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하여 후회하며 눈물을 보였지만, 이미 앞질러진 물이었다.

제3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통장의 실 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소위 '대표통장'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대표통장은 비자금 은닉, 인터넷 직거래 사기, 보이스 피싱 등 다양한 범죄에 사용되어 '금융범죄의 숙주'라고 불리기도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표통장 명의인 등록정보를 분석한 결과, 5만9260명의 대표통장 명의인에 대하여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있다고 한다. 최근 1년간 국민 1000명 중 1명 이상이 대표통장 주인이 된 셈이다.

과거에는 노숙자에게 돈 몇 만 원을 쥐

어준 뒤 통장을 개설하게 하고 이를 팔도록 하는 것이 대표통장 개설방식의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최근 범죄자들은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인터넷상의 통장매입 광고나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가출청소년 등 돈이 궁한 사람으로부터 범죄에 사용 할 대표통장을 매입하고 있다. 통장 양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불과 1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에 불과하지만, 그로 인해 통장을 양도한 사람이 지게 되는 책임은 실로 무겁다.

전자금융거래법은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빌려주는 경우에도 징역 3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통장을 양도한 사람도, 그 통장이 불법적인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라면 주된 범행의 공범으로서 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기 고

소비생활센터와 세로토닌



지 영 배 광주시 민생경제과장

최근 저출산 경향이 지속되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은퇴 후에도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도전하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다. UN 분류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이면 고령사회(Aged-society),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 또는 후기고령사회(Post-aged society)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7%를 초과,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2020년경이면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 사회가 고령화되면 어르신들의 질병·빈곤·고독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부각된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는 어르신들의 소비 피해 예방 및 구제의 중요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곤 한다. 판단력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최근 광주시 소비생활센터를 방문한 한 어르신 사이다. 남구에 사는 A(여·76)씨는 자식들에게 경제적으로 짐이 되기 싫었다. 스스로 벌어서 쓸까 고민하던 참이었다. 올 초 친구를 따라 다단계회사 설명회에 갔다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단단계 건강식품회사에 2100만원이나 되는 거액을 투자했다고 토로했다. 자식을 명의로 동네 농협에서 대출받은 돈이었다.

하지만, 사회활동을 접은 나이에 값비싼 건강식품을 팔기가 생각처럼 어디 쉬운가? 결국, 친인척과 지인들에게 몇 개 팔고 나니, 더 이상 팔 곳이 없었다. '자식들은 물론이고, 친·인척과 지인들에게까지 정말 짐이 되는 신세가 되었다'고 생각하니 난감했다. 다단계 회사에 환불을 요

구했지만, 환불해 줄 리 만무했다.

A씨는 연 6.5% 대출이자까지 부담하면서 자식을 몰래 애를 태우다가 '한 폰이라도 건져볼까' 하고 시청에서 주관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설명회'에 참석하게 되면서 고민을 털어냈다. 교육을 마치고 돌아가다가 우연히 소비생활센터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고, 센터의 도움으로 계약취소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후에야 어렵사리 2100만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늦게나마 피해구제를 받았으니 천만다행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소비자는 구입할 때와는 달리 복잡한 계약 취소 절차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해도 권리를 포기하기 쉽상이다. 이런 고충과 억울함을 해소해주기 위해 광주시는 지난 2001년 11월 전국 최초로 소비생활센터를 개소했다. 센터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소비자의 권익 보장 및 관리구제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곳에서는 연간 1200여건의 소비자상

담 및 피해구제와 함께 계층별 맞춤형 소비자피해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또 언론을 통해 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도 꾸준히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전화·팩스·우편·인터넷홈페이지·방문 상담은 물론이고 내용증명·할부 항변권·할부 철회권·정약철회·미성년자 구매 취소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서류 작성까지도 도와주고 있다.

7월부터는 광주시가 직접 고용한 전문 소비자 상담사 외에도 소비자단체가 파견한 전문상담사를 추가로 배치하여, 지금까지의 전화·방문 상담 위주에서 벗어나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쪽으로 업무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건강 100세 시대가 되면서 '세로토닌'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행복호르몬'이라고 알려진 '세로토닌'은 생기와 활력, 온화한 행복감을 준다고 한다. 소비생활센터가 시민 소비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스트레스를 맘껏하게 해소, 지역민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세로토닌'을 만드는 공장이 됐으면 한다.

社 說

수영대회 총장 해법은 당사자 자진 사퇴다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준비를 총괄할 조직위 사무총장 공백 사태가 2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대회 개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내년 예산 확보까지 부담이 커지고 있다. 사무총장 인선을 위한 동의를 필요한 문화관광체육부는 광주시가 승인한 예산에 대해 조영택 내정자에 대해 청와대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 내정자의 경력을 감안해 '스포츠투는 거리가 먼 비전문가인 데다 국제대회를 치를 만한 전문성이 미흡하다'라고 보고했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머뭇거리고, 문체부도 결정만 기다리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도 조 내정자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김중덕 문체부장관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유능하고 경험 많은 스포츠 관리자 사무총장으로 임명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라는 새누리당 이은재 의원의 주장을 부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

는 특정인에 대한 비토라기보다는 매머드급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치러낼 책임자에 걸맞은 능력이 우선이라는 판단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제 정부의 내년 예산안 편성 시기가 다가오면서 사무총장 선임은 화급한 현안이었다. 유치 단계부터 총리 서명 위주 사건으로 정부가 마뜩잖아 하고 있는 터에 사무총장의 업무 능력까지 문제 삼고 나온다면 적극적인 지원은 낙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지역사회에서는 조 내정자가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물론 조 내정자 스스로도 자진 사퇴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겠지만 당장 얼기설기 영겨 있는 실태를 풀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할 때다. 조 내정자를 천거했다가 곤혹스럽게 된 윤정현 광주시장과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고, 원활한 대회 준비를 위해서는 당사자인 조 내정자가 용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지속 가능한 '사회적기업' 위한 토대 구축을

사회적기업이란 취약 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생산·판매 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기업의 영리성과 자선의 사회성을 통합한 새로운 개념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재투자하는 것이 특징이다.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활동하기 시작하였으며 국내에서는 2007년 7월부터 노동부가 주관하여 시행되고 있다. 재활용품을 수거·판매함으로써 나눔문화를 정착시킨 '아름다운가게'나 결식 이웃에 도시락을 배달하는 '행복도시락' 등은 대표적인 사회적기업이다.

광주·전남 지역에도 많은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경제적 성과 부족, 지역사회 연계 미흡 등으로 인해 지속 가능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적인 성장은 이뤄졌으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사회적기업 육성에는 한계를 보여 왔다는 광주전담연구원 정철 책임연구원의 지적이다.

사실 올 상반기까지 광주에서 135개, 전남에서는 147개의 사회적기업이 지정·운영되고 있으나 영세한 규모, 시장 경쟁력 미흡, 판로 부족 등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오로지 정부지원금만을 쟁점 목적으로 생겨난 기업도 있다.

따라서 이제 정부 주도 육성 정책만이 아니라 기초단체 차원의 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을 만들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역과 연계된 지속 가능한 사회적기업을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가 주도해 지역의 인적·물적자원과 역사·문화자원, 공동체 자원, 활용 가능한 공공·재정지원 등을 파악해야 한다는 정 위원의 지적에 공감한다. 여기에 사회적기업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부분부터 챙김으로써 성장 단계별로 알맞은 눈높이 지원도 있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저 개돼지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이란 자들이 영달과 이익만을 비라고... 도적이 되기를 감수했다" 교육부 고위 공직자의 '민중은 개돼지' 발언 이후, 개돼지라는 단어가 온오프라인을 도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관련 뉴스의 댓글인 듯 느껴진다. 특히 국민이 개돼지라면 개돼지의 세금으로 사는 공무원은 기생충이나 진딧물 같은 존재라는 조정래 작가의 비난과도 흡사한 표현이다.

하지만 위의 표현은 정확히 110년 전 신문 사설의 한 대목이다. 1905년 11월 20

개돼지 대신(大臣)

'시 일야방성대곡'(晝日也放聲大哭)이라는 제목, 즉 '이날을 목 놓아 통곡하노라'라는 뜻으로 실은 사설이다.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11월 17일 대신들을 압박해 강제로 체결한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알리고, 조약 체결에 찬성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대신들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장지연은 이 사설에서 개돼지라는 표현을 두 번 사용했다. 글머리에 쓴 첫

반해 표현은 자신만의 이익만을 쫓아 을사조약을 체결한 정부와 대신을 비난할 목적으로 사용했다.

다음 표현은 '저 개돼지만도 못한 외무대신 박세운을 비롯한 각 대신들이 야심이 쫓겨나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관련 뉴스의 댓글인 듯 느껴진다. 특히 국민이 개돼지라면 개돼지의 세금으로 사는 공무원은 기생충이나 진딧물 같은 존재라는 조정래 작가의 비난과도 흡사한 표현이다.

만 아니라 참정대신 한규설(韓圭濤) 등 조약 반대했다라고 조약 체결을 적극적

으로 막지 못한 대신들까지 비판한 것이다.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은 대신들도 개돼지나 마찬가지라는 우회적인 표현이다. 예로부터 '개돼지만도 못한 놈'이라는 말은 매국노나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사람, 패륜범 등을 지칭할 때 쓰였다. 민중을 개돼지로 묘사하는 행위는 본래 의도가 다른 데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결코 용인할 수 없다. 사 용해서는 안 되는 표현이라는 사실을 애들도 다 안다.

/채희총 사회2부장 chae@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800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 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